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
-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5.3일~ 5.23일)한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개요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금융복합기업집단법§14③, 감독규정§12④)
-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산출(1~5등급)

$$\text{자본적정성 비율} = \frac{\text{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 - 중복자본)}}{\text{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 + 위험가산자본)}} \geq 100\%$$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자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5> 개정)

\* 3<sup>+</sup>~3<sup>-</sup>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①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②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③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

### 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조인트벤처)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등

\*\* 관할권이 다른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는 ①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와 ②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②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內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내부거래 및 위험 집중 관리는 그룹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 (예시) 공동투자,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및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법(§15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內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예) (공동·상호간 거래)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사전검토 대상)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거래금액 비중 등 상대금액과 절대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③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하였다.

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상세내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나혜영 (02-2100-2591)
			사무관	이창민 (02-2100-2521)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책임자	실 장	김국년 (02-3145-8200)
		담당자	팀 장	윤석우 (02-3145-8203)

1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 (문제점)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 발생

①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 기준으로 내부통제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
- 다만,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또는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금융복합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

②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조정

-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이 원칙
  - 다만, 「금복법」상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필요시 일부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조정(배제 또는 수정) 가능

내부통제기준 적용 소속 금융회사 범위(예시)

구분	금융업 영위 회사	금융업 밀접 회사
국 내	적용	예외적 적용 <sup>1)</sup>
해 외 <sup>2)</sup>	원칙적 적용	원칙적 제외

- 1)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일정규모(예: 5인) 이상인 경우 등 관리가 필요할 경우 포함  
 2)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등 금융복합그룹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

③ 그룹별 소속 금융회사 지정 및 보고절차 개선

-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마련\*
- \*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 필요(매년 적정성 재검토 포함)
- 내부통제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별 기준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에 동 사실을 보고, 변경 사유가 발생 시 이사회에 심의·의결 요청 등 절차 개선

◆ (문제점)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관리)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범위(기준) 등 격차 존재

### 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상호간 거래 사전검토 기준 마련

- (원칙)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 실시
  - \* (예)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 검토대상 기준금액은 그룹 자기자본 대비 비중 등 상대금액과 절대금액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그룹이 자율적으로 결정
- (해외)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 거래는 아니나 해외사업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거래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금융·비금융 포함)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 검토대상으로 운영하는 한편
  - 해외 계열사 상호간에만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검토주체를 국내 모회사(금융회사 한정)에 위임

### ② 공동·상호업무 관련 그룹 상호 협업체계 구축

-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현행 법규에 따라 공동 및 상호업무 수행시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 마련
- 다만, 위험관리 측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에 반영하고, 필요시 그룹 위험관리 전담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부서간 원활한 상호 협업체계 구축 추진

### ③ 그룹내 보고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운영

- 전담부서가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한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이슈) 임원 겸직·이직 등 관리는 「금복법」상 주요 내부통제 항목이나 인사교류시 담당부서, 검토시기, 이사회 보고 등 그룹별 차이 존재

### 1 인사교류시 사전검토 대상 확대

- 원칙적으로 소속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 다만,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전이위험 측면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

(참고) 지배구조법상 금융·비금융회사간 겸직 허용 여부

- 「지배구조법」(§10, §11)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他**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상근)에 종사하는 것을 규율(금융위 사전승인 또는 보고 대상)

※ 즉, (i)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의 금융회사 비상근 겸직, 또는  
(ii)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비금융사 비상근 임원 겸직은 同法 적용에서 제외

금융복합그룹 인사교류시 사전검토 필요사항

지배구조법 적용		지배구조법 未적용	
금융(상근) → 금융(상근 or 비상근)	상근 겸직 : 사전 승인 비상근 겸직 : 보고	비금융(상근) → 금융(비상근)	사전검토 (내부점검)
		금융(상근) → 비금융(비상근)	

### 2 해외 금융회사 임원 겸직시 탄력적 관리기준 적용

- 해외 소속 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지배구조법」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이 아니나 「금복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 국내 비금융·해외 금융회사로 겸직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발생 소지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

\* 조인트 벤처(JV) 방식으로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파트너측 임원 겸직은 필요시 관리대상에서 제외

### 3 체크리스트 정비 등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 사전검토를 위한 자체적인 체크리스트 정비 등 통해 겸직 임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